기업들 머리 맞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선점 '속도'

원화코인 제도화 가시권

은행의 자금, 핀테크 기술력 협업
업비트-네이버페이 이달초 맞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발행 가능성

부산은행·경남은행·iM뱅크 등
지역은행 스테이블코인 경쟁 합세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앞두고 기업 간 협업이 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업권별 특장점을 살려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두나무)는 이달 초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협업키로 했다. 관련 법안이 입법 단계에 있는 만큼 발행 주체나 협업 형태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업비트가 유통을 담당하고 네이버페이가 발행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기업 간 협업 사례도 늘었다. 국내 주요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합류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스테이블 코인 상표를 다수 출원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그룹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및 토스와 협업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협업이 활발해진 것은 신용, 기술력, 인프라를 함께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기존 화폐에 연동된 만큼 유통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상품으로 수요가 몰린다. 소비자가 사용 및 매매가 불편한 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막대한 자금과 높은 신용을 갖췄지만 가상자산을 발행할 기술력이 부족하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막대한 발행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유통 경험은 풍부하지만, 외부 결제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이후 '속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 기업들은 자체 역량을 육성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업을 선택하고 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지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뛰어 들었다. 3개 은행은 이달 초 독자적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은행권 공동 연구에 합류했고, 외부 기업과의 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iM뱅크는 이달 초 간편결제·지역화폐 플랫폼 '제로페이'의 사업자인 다날과 업무 협력을 체결했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지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높은 지역화폐와 공공바우처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화폐와 아동급식카드를 비롯한 공공 바우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다. 발행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신뢰도가 높고, 이력 추적도 가능해져 '상품권깡' 등 불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주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무산된 만큼 민간 기업의 참여 여지도 크다.

지역은행은 전국 단위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를 비롯한 지역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하다. 부산은행은 부산(동백전), 경남은행은 울산(울산페이)·창원(누비전), iM뱅크는 대구(대구로페이)·포항(포항사랑상품권)에서 지역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본격화하면 주도권 경쟁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이 논의 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기업도 많다"라면서 "향후 관련 법안이 구체화하고 나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협업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 1박2일 마라톤 쇄신

롯데그룹, 16~17일 '하반기 VCM'
'엄중한 상황' 인식… 체질개선 나서

롯데그룹이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오산에서 '2025 하반기 옛 사장단회의(VCM)'를 연다. 하루 내 일정으로 진행됐던 기존 VCM이 1박 2일로 확대되면서, 고강도 조직 쇄신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달 16~17일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하반기 롯데 VCM을 진행한다.

VCM은 롯데지주부터 시작해 계열사 대표 및 관계자 총 80여 명이 참석하는 전사 협의체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 VCM은 지난 1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렸으며, 약 6시간 가량 진행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반기 VCM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동시에 하반기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던 VCM들과 달리, 올해 하반기 회의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강도 쇄신에 대한 더 엄중한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고강도 혁신을 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진행된 상반기 VCM에서 "지금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통을 이어온 사업일지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모델을 재정의하고 사업조정을 시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높은 쇄신책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실적 부진으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롯데지주 역시 이 영향을 받아 함께 신용 등급이 떨어진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2026년 최저임금 '870원' 입장차 여전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8일 오후 4시 기준 간극을 1000원 미만까지 줄였지만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양측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는 최초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건설업 부진 속 대외여건 악화"

KDI, 7월 경제동향 보고서
"제조업 조정… 생산 증가세 약화"

국내 경제가 '낮은 수준'의 경기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여건도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조업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생산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 증가 폭이 크게 줄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월 0.5%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0.8%를 기록해 전월(-21.1%)과 유사한 수준의 극심한 위축세를 보였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모두 부진했으며, 토목 부문도 플랜트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조처의 영향으로 수출은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6월 수출은 전월(-1.3%)에서 4.3% 증가로 전환됐지만, 이는 선박 수출(67.4%)의 일시적 급증 영향이 컸다.

대 미국 수출은 자동차(-16.1%)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서 1.9% 증가에 그쳤다. 대 중국 수출도 반도체 부진(-6.2%) 영향으로 소폭 감소(-0.4%)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13.4%) 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급증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1.6% 줄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101.8)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트럼프 "美서 제품 만들면 관세 없을 것"

》1면 '트럼프, 韓 25% 관세…'서 계속

한국이 그간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기를 희망했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가능일 하겠다. 다시 말해 몇 주 내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이라고 썼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정책이 초래한 이런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8월 중순까지 상호 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거나 다음 달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